막말·욕설… 지방의회 곳곳 추태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원들간 막말과 욕설 등 꼴불견 백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아직도 갈 길 먼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시민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막말·욕설=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간 이견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공개 간담회가 비공개로 바뀐 뒤 의원들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무등산 조례안과 관련해 A의원이 B의원에게"○○○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자, B의원은 A의원을 향해 "XXX의 말만 듣는…"이라며 막말이 오갔다.

이밖에 몇몇 의원들은 안건 발의에 앞서 동의 서명과정에서 안건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채 서명해줬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편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등산 조례 수정동의안'은 강박원 의장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의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다시 마련한 뒤 다음 회기때 의결하기로 했다.

◇해묵은 앙금에 꼬이는 의정=순천시의회가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알력 다툼을 벌여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 앞에서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안' 제정과 관련,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시위하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됐다. /나명주기자 mjna@

광주시의회,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다 뒤늦게 철회

순천·나주시의회, 해묵은 앙금에 알력 다툼 '눈총'

순천시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다툼으로 번졌다. 더욱이 이에 앞서 27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는 의원 23명 가운데 16명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7명에 불과했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반대·기권표가 10표에 달해 일부 의원들의 갈짓자 행보가 구설에 올랐다.

나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간 갈등이 재연됐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경제건설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류인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대립하는 바람에 심사조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 이번 갈등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간 해묵은 앙금에 따른 것으로, 무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발목잡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상임위는 총 6명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 3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은 2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한반도 '격동의 4월' 박 지 원 의원 인터뷰

"대북정책 혼선이 남북경색 불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으로부터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 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과잉대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 공동보조를 취하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 표명을 빨리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美 군사적 대응 반대'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쉽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될 경우, 냉각기가 있겠지만 북미 간의 물밑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비, 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등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PSI 참여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다. 강경 대응한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 보다 신중하고 실효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UN의 대북 인권결의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잘못한 것이다.

-북한이 남측 직원을 억류하는 등 개성공단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마지막 상징이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면 우리는 연간 21조원, 북한은 6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꼽는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결여됨에 따라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전혀 실용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대북 정책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진전을 이뤄왔던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리고 있다.

-최근의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한가.

"개성공단 가동 멈출 땐 南 21兆, 北 600억 손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가 오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계신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하신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신속하고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도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미 간의 직접대화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지위마저 잃게 된다.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인식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의원이 市 기관 변론 맡아 물의

변호사 출신 이철원 의원, 도시공사 소송대리인 수임

변호사 출신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산하기관의 소송사건 변론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 단체가 광주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어등산개발 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광주시의회 이철원 의원이 도시공사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밝은세상은 지난해 6월3일 도시공사와 삼능건설컨소시엄 간에 체결한 '어등산 개발 협약서 일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도시공사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맞서 밝은세상은 같은 해 9월9일 도시공사를 상대로 정보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0월14일 도시공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시공사측 소송대리인이 변호사 출신 이철원 의원으로 밝혀지자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광주시를 비판·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시민단체가 알권리 차원에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며 "시민들 편에 서서 싸워야할 의원이 그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원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요청해 자문을 해줬으나, 사건이 송사로까지 이어져 그 연장선상에서 맡게 됐다"면서 "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맡았는데 시의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심리는 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

北, 억류 美 여기자 재판 회부

불법 밀입국·적대행위 혐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사과정 영사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달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당국에 붙잡혀 억류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미국 기자들에 대해 "적대행위 혐의"도 확정됐다고 말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두 기자들에게 '불법입국' 혐의 외에도 중대한 죄목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대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간첩 혐의를 말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기자의 조기석방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리비아 연안 이민선 3척 침몰

300여명 사망 실종

불법 이민자를 태운 선박 3척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리비아 연안에서 잇따라 침몰해 수백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이민기구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IOM의 장 필립 쇼지 대변인은 이날 "이민자들을 가득 태운 선박 3척이 강풍을 만나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종자 수는 300명 이상"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이들 이민자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밀항하기 위해 이들 선박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IOM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비아의 유력 일간 오에아는 3척의 선박이 트리폴리 인근의 연안마을인 시디 베랄에서 출항했다가 난파됐다고 전하면서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익사한 이민자의 시신 23구를 인양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